다산포럼

‘제왕적 대통령’ 담론 유감

고 세 훈
고려대 명예교수

한국이 유신과 전두환 체제에서 경험했던 ‘대통령 간선제’는 개인의 권력욕이 빚은 것이었고, 짧은 ‘의원내각제’ 실험은 변변한 교훈을 얻기도 전에 쿠데타로 막을 내렸다. 그리하여 우리는 6월 항쟁이 안겨 준 ‘대통령 직선제’만으로도 민주주의를 다 이룬 듯 흥분했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정치권 안팎에선 ‘제왕적’ 대통령을 탓하며 다시 정부 형태를 문제 삼는다. 그 와중에 권력 구조의 초석이 되는 정당 조직(당내 민주주의)과 정당 체제는 그 전근대적 후진성으로 인해 줄곧 한국 민주주의의 발목을 잡았고,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에 묶인 한국 정치는 지역주의와 이념적 보수성의 폐쇄회로에 갇힌 채 출구를 못 찾고 우왕좌왕해 왔다.

이른바 민주화 이후 한 세대가 지났으니 정부 형태 등 권력 구조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자연스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 동기가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는 애초에 권력 구조 개편의 본말을 한참 전도시킨 문제 제기라 아니할 수 없다.

권력은 늘 집중되기 마련

예컨대 의원내각제의 모국이라는 영국도, 특히 대처 총리 이후, ‘선출된 독재’(elective dictatorship)의 길을 가고 있다는 지적이 드물지 않았거니와, 그 나라에서도 총리가 ‘제왕적’으로 될 수 있는 조건들은 도처에 널려 있다. 첫째, 대표성과 관련한 명백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소선거구제는 거대 양당이 정부와 의회를 동시에 지배하는 상황을 적어도 이론적으로 확립시켰고 둘째, 의회의 제1당-종종 과반 의석을 훨씬 상회하는-당수가 자동적으로 총리가 되며 셋째, 총리 한 사람이 통상 집권당 하원의원의 1/3 이상으로 채워지는 집행부(frontbenchers)의 구성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넷째, 일단 정부가 출범하면 총리는 당 규율(party whip)을 동원하여 내각을 포함한 집행부 전체를 집단 책임의 원리-비록 점차 약화되긴 하지만 여전히 관행화된 원칙으로 살아 있는-에 묶을 수 있는 구조 등이 그것들이다.

어떤 점에서 보면, 미국식 대통령제야말로 구태여 여소야대 상황이 아니더라도 최고 권력자의 ‘제왕적’ 행태를 제어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부 형태일지 모른다. 535명의 상하의원 각자가 저마다 막강한 정책 결정 기관으로 기능하면서 곳곳에서 정부 정책의 비토를 위협하며 의회에서의 빈번한 교차 투표로 인해 입법 과정을 교착 상태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분산을 꾀하는 권력이란 없다. 설사 이원집정부제 등 다양하게 변형된 정부 형태를 택한다 해도 실질적 권력 곧 한 사회의 자원 배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힘은 결국 대통령에게든 총리에로든 쏠리기 마련이다. 가령 대통령을 상징적 권력에 가두면 실질적 권력은 총리를 향하게 돼 있다. 권력의 집중(경향)을 완화할 수는 있을지언정 발본하려는 것은 어리석다.

먼저 선거제도 개혁해야

실은 ‘제왕적’이란 말 자체가 정치적 편견에 깊이 침윤된 수사다. 원래 그것은 70년대 초 미국의 진보 진영이 보수적 대통령의 독단적 외교 정책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한 단어였지만 기이하게도 한국에서는 ‘국민의 정부’ 시절 보수 언론이 정부의 국내 정책을 트집 잡기 위해 일상적으로 동원했던 선동적 언어였다.(‘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최장집) 오히려 한국처럼 권위주의 적폐에 맞서야 하는 사실상 민주주의 이행기에 있는 나라의 경우는 새 제도들이 도입되고 정착되기까지 개혁의 동력은 어차피 개인 특히 대통령에서 올 수밖에 없다. 구조가 부실하면 강력한 개혁 의지를 지닌 권력자의 역할이 부각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한국정치 문제의 본질은 정부형태도 ‘제왕적’ 대통령도 아니다. 민주주의가 정당정치 위에 서 있는 한 우선 관건은 선거제도에 비례대표 원리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권력 자체의 대표성을 확립하는 일, 곧 기존의 보수 양당 구조를 뛰어넘는 개방적 정당 체제를 만드는 일이다. 다행히 우리에겐 종교·인종·언어 등 정체성 정치를 부를 갈등 요인이 없기 때문에 극단적 정치 세력이 발호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 정치권의 기득권이 현실적 장애라면 현 체제에 더하여 비례대표 지분을 대폭 늘리면 된다. 의원 수가 급격히 늘 수 있겠지만 가령 영국의 경우 하원의원 수가 19세기부터 줄곧 650명 내외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혁적 인물을 거르는 사전적 장치로서 명실상부한 당내 민주주의가 정착되도록 정당 조직의 항구적 개편이 절실하다. 지난 세월이 증언하듯이 선거민주주의만으로 기회주의적, 반개혁적 인물의 정치권(재)진입을 막아 내기엔 역부족이다. 엘리트 충원의 일차적 메커니즘으로서 정당민주주의는 선거민주주의와 함께 이중적 민주주의 장치의 두 축을 형성한다.

정당 체제와 정당 조직 개혁이 선행되지 않으면 권력 구조 개편을 둘러싼 작금의 모든 소동은 다시 공염불이 되고 만다. 지역과 공천을 둘러싼 지긋지긋한 이합집산의 정치 또한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단에서

봄을 볼 수 없어요

김 진 구
우산중 교감

어느 젊은 부부 집에 시어머니가 방문했다. 일주일을 계획했는데 한 달을 머물렀다. 시어머니를 내보낼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다.

“오늘 저녁에 국을 대접하면서 우리가 막 다툽시다. 당신은 너무 짜다고 하세요. 난 오히려 싱겁다고 할게요. 만일 어머님이 당신 편을 드시면 내가 발끈 토라지며 그럼 가시라고 하겠어요. 내 말이 맞다고 하시면 당신이 버럭 화를 내며 떠나라고 그러세요.”

밥상이 왔고 말다툼이 사나워지자 아내가 말했다.

“어머님은 어떠세요. 국이 짜요 싱겁소?”

시어머니가 숟갈로 국물을 떠서 입맛을 다셔 보고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내 입엔 맞구나.”

시어머니는 절묘한 답변으로 쫓겨나지 않았다. 실제로 입맛에 딱 맞았을 수도 있지만 부부의 의도로 보아 싱겁거나 짰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 중립이라는 절제된 감정을 말함으로써 난처한 상황을 잘 마무리한 것이다.

점심시간에 등나무 밑을 지나가는데 여학생 몇 명이 언성을 높이고 있었다. 엄마와 함께 수영장에 다닌다는 학생이 친구에게 ‘너도 살이 쪘으니 운동을 하라’고 권한 것이 다툼의 발단이었다고 한다.

작가 데이 셰퍼트는 말을 할 때 세 가지를 깊이 생각한 후에 당당하게 말하라고 했다. ‘첫째는 참말인가?, 둘째는 필요한 말인가?, 셋째는 친절한 말인가?’이다. 시어머니의 대답은 참말이 아니다. 그러나 필요하고 친절한 말에는 일치되지 않지만 어느 정도 근접하다. 참말(진실)이 아니어도 화평해 졌다. 학생이 친구에게 말한 ‘살이 찐 것’이나 ‘운동을 해야하는 것’은 참말이고 필요한 말이다. 그런데 셋째 친절한가 아닌가 즉 감정의 문제에 부딪쳐 불화가 발생한 것이다. 우리들은 살면서 대체로 사실을 말하고, 필요한 말을 하지만 감동적이지 않고 감정적인 말 즉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친절하지 못한 말 때문에 상처를 준다. 이처럼 말이란 어렵고도 무섭다.

지금 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여러 나라 지도자들이 연일 말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고위 벼슬 청문회에서 수년 전에 내뱉었던 자신의 말들이 되살아나 자퇴하는 사례가 많다.

교단에서도 교사의 말이 학생에게 큰 상처를 주고, 학생의 언행으로 괴로움을 호소하는 교사가 늘어가고 있다. 강하게 한 말은 순간 시원할지 모르지만 더욱 거칠게 돌아오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말은 불씨가 되어 스스로를 태운다.

“삶의 지혜는 종종 듣는데서 비롯되고, 삶의 후회는 대개 말하는 데서 비롯된다.” ‘말의 품격’을 쓴 이기주의 글이다. 흔하디흔한 교훈이지만 울림이 큰 한 문장이다. 갈까 말까 망설이는 여행은 가고, 살까 말까 망설이는 물건은 사지 말고, 할까 말까 망설이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한다.

지금 학교에서는 창의적인 교수학습을 위해 스토리텔링 기법을 강조하고 있다. 위에서 말한 데이의 세 번째에 해당하는 친절한(감동적인) 말이다. 단순한 팩트의 서술이 아니라 팩트를 바탕으로 삶과 연결된 이야기를 만들어서 공감하는 교수법이다. 명강사라고 소문난 분들의 강의를 들어보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그 배경이나 생생한 사례를 곁들여 구성지게 말하면 얼마나 절절하던가.

뉴욕 지하철에서 거지가 깡통을 앞에 두고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라는 팻말을 들고 있었다. 행인들은 무심하게 지나갔고 깡통에는 찬바람뿐이었다. 어느 행인이 다가와 팻말 뒷면에 무언가를 다시 써줬다. 그러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다. 깡통에 돈을 넣고 온정어린 격려의 말을 건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무심한 행인들이 따뜻한 이웃으로 변한 것이다. 팻말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 “지금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봄이 와도 봄을 볼 수 없습니다.”

기 고

아이들에게서 지구의 희망을 보다

문 병 재
광주시 환경정책과장

꿈은 진실로 이루어진다. 마음의 진정성,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고의 변화, 그 변화로 강력한 실천력을 발휘한다. 이런 말을 떠오르게 하는 아이들이 있다. 바로 올해 ‘다(多)가치그린 동네만들기’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는 어린 학생들이다. 아이들은 지구 온난화로 세계 곳곳에서 홍수, 가뭄, 폭염피해 등으로 많은 식물과 가축들이 사라지고 심지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학교 환경교육을 통해 배우게 됐다. 자연이 이상하게 변한 게 아니라 인간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일회용품, 일회용품을 만들기 위해 사라지고 있는 나무들, 전기 낭비, 편리함에 길들어진 차량의 증가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과 이에 따른 오존층 감소 등 숨 쉬는 것만큼 길들여져 온 우리의 생활방식들이 그 주범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다가치 그린’은 환경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포인트로 동네환경을 스스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시민주도형 환경개선사업으로 학생 뿐만 아니라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참여단체 당 300만원 내외의 금액이 지원된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2개 단체는 ‘다가치그린 동네만들기’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모바일 앱을 통해 쓰레기 방치 신고, 공공시설 평가 등 환경지킴이 활동을 통해 포인트를 차곡 차곡 쌓았고, 학생과 학부모, 주민들의 동참으로 포인트를 기부 받아 동네환경 개선 사업비를 마련해 좋은 활동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학생들의 활동은 괄목할 만하다.

문흥초 3~4학년 등 22명으로 구성된 환경동아리 도깨비팀은 크게 세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첫 번째 지구의 날 행사 및 전남대 주변에서 리플릿 나눠주기, 환경보호다짐, 환경퀴즈부스 운영, 다가치 그린 송 부르기 등 환경캠페인 활동을 하였고, 두 번째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해 과속방지 카메라 및 과속방지턱, 오렌지카펫 설치 등을 요청하는 교통안전 보고서를 작성해 9월 중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 개선 요구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9~11월에는 쓰레기 불법투기지역 청소, 마을 정화활동을 마을 주민들과 함께 전개하여 불법투기지역 개선에 앞장설 계획이다. 농성초등학교 담장 벽화그리기사업은 전교어린이회가 주축이 되어 환경문제 및 실천 중요성에 대한 이론교육, 모바일 앱 포인트 기부, 전교생 450여 명의 의견 수렴을 통한 벽화 주제 선정과 디자인 확정, 벽화 그리기 등 모든 과정을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참여한 환경교육의 좋은 사례라 말할 수 있다.

또 문성중 텃밭동아리반과 봉선2동 주민이 주축인 마을교육공동체 ‘십시일반 나눔학교’, 봉선2동 주민센터 직원 등 50여명이 함께하는 텃밭 가꾸기 및 환경지킴이 활동은 학생들과 마을공동체 협력사업의 모범적 사례이다. 학생들과 주민들이 문성중 교내에서 상추, 토마토, 무 등 10여종 작물을 25개 텃밭상자에 재배하고 있다. 수확한 작물은 서로 나눠 먹고 있으며 9월 중에는 어려운 이웃에게도 나눠드리고, 11월 중에는 봉선2동 주민센터에서 사업에 대한 최종평가와 수확물로 차려진 공동체밥상도 함께 할 계획이다.

매월 1회 마을 청소와 ‘다가치 그린’ 홍보,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캠페인 등 환경지킴이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 지난 5월 하순, 전남대 후문 쪽에서 문흥초 학생들과 함께 거리를 지나가는 시민들로부터 다가치 그린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접수 및 환경캠페인 활동을 하면서 그들의 바람과 의견을 들었다. 학생들은 “지구가 곳곳에서 아파하고 있고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일회용품 하나라도 덜 쓰고 자전거를 많이 이용해, 쓰레기와 자동차 가스가 없는 세상이 오면 지구의 환경이 절로 좋아질 것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어르신들, 쓰레기 버리지 말아 주세요!” 라고 외칠 때 많이 부끄럽기도 하였지만, 다가치 그린사업을 하고 있음이 뿌듯하였고, 지구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겠다는 그들의 투철한 모습에서 하나 뿐인 지구를 지켜 내려하는 강한 힘과 꿈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다가치 그린 사업은 시민 주도로 동네 환경을 지키면서 더불어 잘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사업에 참여한 학생들, 이들을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더불어 시민 모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꿈의 실현을 앞당겼으면 한다.

社 說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그 누가 납득하겠나

전국한우협회 등 시민단체와 중소상공인 단체 등 3000여 명은 지난달 29일 국회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수산물 제외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처럼 ‘김영란법’으로 인해 농어민과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추석은 다가오는데 이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안은 국회 상임위에 상정돼 있지만 언제 통과될지 기약하기 어렵다.

국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의원총회를 열고 정기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음모에 대한 투쟁’이라며 국회 보이콧을 통해 국민에게 고발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다만 ‘안보 문제만큼은 초당적으로 임할 것’이라며 국방위·정보위·외통위 등에 대해선 참석 의사를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보이콧 이유로 문재인 정부의 언론 장악 기도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김 사장 체포영장을 두고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태도를 납득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우선 MBC 노조로부터 고발당한 김 사장은 여러 차례 서울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의 소환에 불응했다. 소환에 불응한 방송사 사장을 지키기 위해 국회를 볼모로 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죽하면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가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결정에 대해 “범죄 피의자의 도주를 돕는 ‘김장겸 은닉 보이콧’에 불과하다”고 비난했겠는가. 이 대표는 “한국당의 이번 국회 보이콧은 적폐 세력의 공범자임을 스스로 자백한 꼴”이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민생 현안을 포함한 각종 법안 처리와 예산안 심의는 지연되거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자유한국당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고집 부리지 말고 무조건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

또 일가족 자살…사회안전망 구축 절실하다

가난과 가족의 질병 등으로 한계상황에 처한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 정신질환을 앓는 자녀를 돌보지 못한 자책감에 빈곤이 겹친 가족,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부녀가 잇따라 목숨을 끊었다. 지난 2014년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긴급 복지 지원법 등을 마련했지만 이들에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지난 1일 광주 북구 중흥동 한 주택에서 A(49)씨 부부와 딸(20) 등 일가족 3명이 “우리 3명을 같은 관에 넣어 화장해 뿌려 달라”는 유서를 남겨 놓고, 숨진 채 발견됐다. 애초 대전에 살았던 A씨는 정신질환을 앓던 아들이 통제 불능의 폭력성을 보이자 1년여 동안 방안에 가둬 놓고 생활하도록 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이 경찰에 신고되면서 감금·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은 A씨는 보호시설로 보내진 아들에 대한 접근금지처분을 받았다. 아들과 떨어져 살게 된 A씨 가족은 자신들의 사정을 이해해 주지 않는 현실에 자살까지 기도했다. 이후 A씨는 아내의 언니가 사는 광주로 내려왔으나 일용직 노동으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했으며, 딸도 고교 졸업 후 취업을 못해 온 가족이 극심한 가난에 시달려 온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장성의 한 저수지에 빠진 차량에서 딸의 2학기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여성 가장(46)과 대학생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 가정은 가장들이 나이나 건강 등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지 못했으며, 고졸 청년 혹은 대학생의 극한 빈곤도 지원을 받지 못했다. 정부가 의료 보호 확대와 기초연금 상향 등 서민 복지를 강화하는 만큼 목숨을 끊을 정도의 극한 빈곤이나 가정이 해결 불가능한 질병 등의 재난에 대해서도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국회의사당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에는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이 있다. 국회의사당은 국회의원들이 국정을 논의하는 장소로, ‘민의의 전당’ 또는 ‘민주주의 전당’으로도 불린다.

우리나라는 초대 제헌국회와 2대 국회 때 중앙청 회의실을 임시 의사당으로 사용하다가 6·25전쟁 중 ‘피란 국회’를 거쳐 1953년 9월 조선총독부의 관립극장인 서울 태평로의 부민관(府民館)을 수리, 국회의사당으로 사용했다. 이 의사당은 1975년 9월1일 여의도 의사당이 준공됨에 따라 1975년 7월9일 회의를 마지막으로 문을 닫았다. 그리고 9월22일 제94회 정기국회를 개원하면서 여의도 의사당 시대가 시작됐다.

이제 42세로 중년에 접어든 여의도 의사당은 대지 10만평에 본관·의원회관·도서관·의정관·헌정기념관 등으로 구성돼 있고 추가로 미디어센터를 건립 중이다. 본관은 경회루의 석주를 본뜬 높이 32.5m의 대열주(大列柱) 24개를 둘러 세웠다. 기둥 24개는 24절기를 의미한다. 지붕은 밑지름 64m의 돔으로 돼 있는데 원만한 결론을 의미한단다.

본관 내부는 국회 양원제 실시에 대비해 두 개의 대형 회의장이 있다. 현재 본회의장은 민의원 본회의장으로 쓰일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950㎡(288평)이며, 의석은 이동식으로 400석까지 확장이 가능하고 방청석은 350석, 기자석은 80석이다. 이 회의실 천장의 365개 전등은 1년 365일 내내 국민이 지켜본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한다.

이 본회의장 맞은편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은 참의원 본회의장으로 쓰일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의석 100석, 방청석 250석, 기자석 40석으로 돼있다. 이 두 대형 회의실 사이에는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여야 의원들의 몸싸움이 자주 벌어졌던 사방 40m의 ‘로텐더 홀’이 있다.

지난주 정기국회가 개원했다. 시민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첫 입법·예산 국회이니만큼 국민의 관심이 국회로 향하고 있다. 그런데 벌써 자유한국당의 거부로 의사일정이 파행하고 있다. 국내외로 어려움이 많다. 여야가 의사당 건립의 취지에 맞게 국민을 위한 정기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줬으면 한다.

/서울취재본부 박지경 부장 jkpark@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32
사회부 220-0642
사회2부 220-0652
경제부 220-0663 〈FAX 222-4938〉
문화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사진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디자인실 220-0536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